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지진피해지역 지방은행들 공적자금 신청 확산

□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발생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지방은행들이 연이어 공적자금을 신청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북부 최대 규모인 77은행*은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어 금융기능강화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공적자금 지원을 신청한 상태임.

* 77은행은 미야기현에 본사를 두고 동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지방은행으로 134개 지점과 7개의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2010년말 13%에 달하는 등 지방은행 중에서 우량은행에 속함.

** 금융기능강화법은 지방은행, 신용조합, 금고 등 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전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04년에 시행된 법률

□ 또한, 동북지방의 신용조합이 큰 손실을 입은 가운데 신용조합중앙회에 해당하는 전국신용조합연합회는 피해지역에서의 영업활동 지속을 위하여 조만간 공적자금을 신청할 예정임.

○ 이에 앞서 센다이시에 위치한 센다이은행도 공적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의 경우 이와테은행, 도호쿠은행, 기타니혼은행의 58개 지점이 한 달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 지방은행들의 공적자금 신청은 대지진 이후 기업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으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각 지점들이 지진으로 인해 한달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임.

○ 일본 금융당국은 지진피해 지역 지방은행들의 금년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신청에 따른 금융쓰나미 확산 우려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지방은행 등의 공적자금 신청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후지산케이비즈니스 4/19, 니혼게이자이신문 4/20, 마이니치신문 4/20 등 뉴스 종합)